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A책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학'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문제보다는 수업시간에 늘 강조해 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어 하이패스 행정학과 함께 한 수험생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출제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인 법령'이나 '과거의 기출지문과는 다른 방식의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중심의 학습보다는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식 학습을 해왔던 수험생들이나 자세하고 세밀한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로는 문제 7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문제와 문제 8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문제 및 문제 19번 공론조사에 관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 7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법률로 최근 개정된 법률이지만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무난히 해결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패스 행정학 이론심화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8번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문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자주 세부적인 법령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험생들은 이 법령의 내용을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19번 공론조사에 관한 문제는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어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문제였습니다. 해설을 참조하여 명확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 모든 공무원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 2018. 10. 13 하이패스 행정학 이명훈 -

0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 ① 행정안전부
- ② 국회사무처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④ 법원행정처

정답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①항, ②항). **☞ 하이패스 행정학 p578**

핵심체크 소청심사위원회

의의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
설치	• 행정부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 • 자치단체 : 시·도(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에서 담당 • 헌법상 독립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은 각각의 조직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에서 담당
심사대상	경력직(일반직·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
구속력	필요적 전심절차로 그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함
특징	• 특수경력직은 신분보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청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소청은 위법적 사항에 한해 제기될 수 있으며, 부당한 사항은 고충상담의 처리대상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나 승진탈락은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청심사위는 중앙고충처리기능도 담당(소청심사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나,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 없음)

0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답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정부적 통합관리(③), 개방과 경쟁(①), 성과와 책임(④), 능력발전(④),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핵심요소로 한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도모하였다. **하이패스 행정학 p569**

핵심체크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념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개방과 경쟁 및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직분류 제도
도입	• 미국의 카터정부에서 개방형 인사제도(SES)로 최초 도입 •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2006년)에서 제도화
핵심요소	① 고위공무원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② 개방과 경쟁, ③ 성과와 책임, ④ 능력발전, ⑤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등
구성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 외무공무원의 군
관리	계급(관리관, 이사관 등)이 폐지되고 직위의 직무 값에 따라 부여되는 2개의 직무등급(가급, 나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충원	소속 장관별 개방형 직위(20% 범위), 공모직위(30% 범위), 기관자율직위(그 외)
근평	성과계약 등 평가(직무성과계약제)
보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과 성과연봉의 결합
검증	적격성심사제

0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정답 ④ 거버넌스적 서비스 연계망은 공동체주의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보다는 이해관계 없는 자들의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100**

핵심체크 거버넌스의 한계

한계	• 연결망의 자기조직화 경향으로 인한 조정(steering) 곤란 • 분절화(fragmentation)현상으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 •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책임소재 규명 곤란(책임 떠넘기기 현상) • 공동화국가(hollow out state) 초래 • 정책담합가능성(정부와 특정집단 간의 유착관계 형성) • 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로 행정의 정체성 확립 곤란 • 거버넌스의 형태가 다양하여 보편적 이론화 곤란
----	---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정답 ② 과거 근대입법국가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관료에 대한 통제(외부통제)가 중시되었으나,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고 행정인의 자유재량권과 자원배분권이 확대된 행정국가시대이후에는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외부통제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부통제가 중시되고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195**

오답정리

- ①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③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행사한다. 직무감찰은 내부통제 수단인 감사원이, 옴부즈만은 내부통제 수단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사한다.

핵심체크 행정통제의 구조와 방식

구분	특징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내부 통제	•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행정국가 및 정치행정이론에서 중시 •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행정국가에서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방식	• 행정수반 및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에 의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근평제도에 의한 통제 • 감찰통제, 예산통제, 정원통제 등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 •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 공익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	•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근대입법국가 및 정치행정이론에서 중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민중통제 및 언론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 및 고객에 의한 통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정답 ④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가능한 핵심지표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비전과 임무를 하위체제인 전략으로 연계하고, 전략을 하위체제인 성과지표로 연계하는 하향적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 개인의 실적평가가 아닌 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비전, 임무, 전략에 따른 평가를 중시한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재무관점(①),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성장과 학습 관점(②),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③)는 고객관점과 관련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85**

핵심체크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의의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칼프란과 노튼)		
측정 지표	재무관점(과거시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시장점유율, 원가절감율 등	
	고객관점(외부시각)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을, 신규 고객 증감 등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시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	
	학습과 성장 관점(미래시각, 선행지표)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 만족도 등	
기능	- 성과측정시스템 : 조직원의 성과평가를 위한 장치 - 전략관리시스템 : 조직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 성과지표, 실행계획으로 케스케이딩하여 완성되는 하향적 전략관리시스템 - 의사소통도구 :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과지표의 형태로 전달		
특징	- 전략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는 관리방식 - 체제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임무 ⇒ 전략 ⇒ 성과지표로 연계하는 위계적(계층적) 체제 - 상호균형 : 재무와 비재무, 외부와 내부, 선행과 후행, 단기와 장기 간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기법 - 인과관계 :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동인으로부터 재무 관점의 향상된 재무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로 연계된 평가체제		
정부 적용	BSC의 원형은 재무관점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재무관점은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보고 사명달성의 성과, 납세자 관점, 고객 관점 등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③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④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정답 ③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을 규칙적 오류(일반된 오류)라 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603

핵심체크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연쇄효과 (halo-effect , 후광효과)	의의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
	극복방안	① 체크리스트법, ② 강제 선택법, ③ 평정요소별 평정, ④ 유사한 평정요소는 가급적 멀리 배치, ⑤ 평정요소마다 용지를 달리함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경향	의의	• 집중화(중간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중간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 • 엄격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낮은 쪽에 집중되는 경향 • 관대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
	극복방안	강제배분법
규칙적 오류 · 총계적 오류	의의	• 규칙적 오류(일반된 오류) : 특정 평정자의 평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하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 •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극복방안	규칙적 오류는 후하거나 막한 정도를 계산하여 사후 조정이 가능하나, 총계적 오류는 사후 조정 불가능
최초효과· 근접효과	의의	• 최초(첫머리)효과 : 초기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 근접오류(시간적 오류) : 최근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극복방안	① 중요사건기록법, ② MBO, ③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상동적 오차	의의	평정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학교·출신지역·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선입견에 의한 오류,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
	극복방안	① 신상정보 비공개, ② 상관 외의 제3자를 평정자로 활용
대비착오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	
유사착오	평정자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착오	
투사에 의한 착오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데서 오는 착오	
기대성 착오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평가하는 착오	
논리적 오차	한 요소의 평정점수가 논리적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의 평정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선택적 지각의 착오	부분적인 정보만 받아들여 평정하는 착오(추측에 의한 착오)	
방어적 지각의 착오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왜곡하여 나타나는 착오	
근본적 귀속의 착오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	
이기적 착오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자존적 편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 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기관위임사무의 원칙적 폐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및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776, p799**

오답정리

- ①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포함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정답 ④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832

핵심체크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정답 ③ G2G(Government, Government)는 정부 내부의 전자서비스를 의미하며, G2G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172

오답정리

-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증진된다.
-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증진된다.
-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며, 전자조달의 활성화로 조달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핵심체크 전자행정서비스

유형	내용	구체적인 예
G2C (GNC)	일반국민을 위한 전자 서비스	- 정부24 : '민원24'를 개편한 통합민원정부서비스 - 국민신문고 :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 시민의 정책제안 및 전자투표를 통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온라인 플랫폼 - 미국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 : 오바마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과제를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해결할 목적으로 만든 정부플랫폼(온라인 민·관공동생산)
G2B	기업활동을 위한 전자 서비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타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G2G	부처 내, 부처 간 전자 서비스	- 온-나라 시스템 : 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정부통합전산센터), - 기타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답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활동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이패스 행정학 p108

핵심체크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개념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 수행에서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행정 이 소유자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운동
배경	전통적 행정(관료제)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이론적 기초	① 민주적 시민주의, ② 시민사회모형 및 사회공동체주의, ③ 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신행정학), ④ 조직인분주의
내용	• 행정의 주요가치 : 공유된 가치와 공익 • 행정의 역할 : 방향잡기가 아닌 봉사 • 행정의 대상 : 고객이 아닌 시민 • 행정의 활동방식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인 행동 • 행정의 책임 : 책임의 다원화(복잡화) • 관료에 대한 시각 : 통제에서 공유된 리더십 • 가치에 대한 시각 : 기업가 정신이 아닌 시민주의(citizenship) • 인간에 대한 시각 : 생산성이 아닌 사람 존중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정답 ③ 영기준예산제도(ZBB)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상향적 예산제도로 오히려 재정팽창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697

핵심체크 목표관리 예산제도(MBO)

의의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발달	닉슨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도입(1973)
특성	① 신축적인 단기예산, ② 대내지향적 예산, ③ 참여지향적 예산, ④ 결과지향적 예산, ⑤ 상향적·미시적 예산결정, ⑥ 정책집행 중시, ⑦ 목표 간 조화 추구
장점	① 분권적·민주적 관리, ② 내부통제에 의한 사업운영의 효율화
단점	① 목표설정 및 계량화 곤란, ② 경직성 경비의 과다로 인한 적용 곤란, ③ 단기목표 중시, ④ 업무의 계량화로 인한 과다 업무 발생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정답 ③ BTO의 경우 민간투자기관이 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민간이 부담하며, 이로 인해 민간과 정부는 적자보전협약(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을 체결한다. 반면, BTL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162**

핵심체크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의 비교

	BTO(수익형 민자유치)	BTL(임대형 민자유치)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도 가능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이용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납부)	정부(이용자는 정부에게 이용요금 납부)
투자비 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 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부담을 짐	민간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부담을 지지 않음
목표 수익률 실현 방법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보장 - 적자보전협약(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 보장	사전적으로 목표수익률 실현 보장 -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지급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답 ②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조직구조는 기능구조이며, 매트릭스 조직은 사업구조의 신속한 설치와 폐지를 통해, 팀제는 임시조직의 속성을 지닌 팀구조의 신속한 설치와 폐지를 통해 정보화시대에서 ‘스피드의 경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438**

핵심체크 매트릭스(Matrix) 조직

의의	계서적 특성을 지닌 기능구조(직능 조직)와 수평적 특성을 지닌 사업구조(프로젝트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특징	• 기능구조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구조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원적 권한체계를 지닌 조직구조 • 기능구조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한 조직구조 • 조직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기능적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중명령을 받는 조직구조 (명령계통의 다원화)
도입	특수대학원, 대형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사관 조직,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장점	• 이중구조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 • 조직원이 다양한 업무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능력발전 촉진 • 조직원의 협동 작업으로 상호이해와 통합 촉진 • 각 기능과 사업별 간 조정이 용이하여 할거주의 극복 • 조직단위 간 정보 흐름의 활성화로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라인 혁신 동시 충족(분화와 통합의 조화) • 대규모화되어 가는 조직의 구조적 경직화를 막고 융통성 부여 •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한시적이고 새로운 사업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점	• 이중명령으로 조직원들에게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야기하여 혼란과 갈등 초래 • 지휘계통의 다원화로 조직원의 소속감 결여, 업무처리 혼선 야기, 권한과 책임의 한계 불명확 •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능부서 간 할거주의로 조정 곤란 • 권한구조의 다원화로 관리계층 증가 •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 발생 •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 불가능 • 조직관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의 지연 및 과도한 시간 소모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중앙정부에, 2008년에 지방정부에 도입되었다.  **하이패스 행정학 p677**

핵심체크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이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우리나라 예산과목 중 '항'에 해당)
프로그램 예산제도	의의	-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한 예산 - 국가재정운용계획(분야-부문 결정)과 연계된 하향식·거시적·장기적 예산
	대두배경	투입중심의 단년도 예산 운영 극복 및 성과중심의 다년도 예산 운영 확립
	도입	중앙정부(2007년 도입), 지방정부(2008년 도입)
	특징	- 각종 예산제도의 중심점 : 성과관리, 발생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중심점 - 예산과정의 중심점 : 예산편성단계에서 전략적 배분 단위, 총액배분자율편성의 한도액 설정 단위, 예산사정단위, 예산심의 단위, 예산집행에서 이용 단위, 결산단계에서 성과평가 단위, 결산보고 단위 - 원가계산의 중심점 : 회계 차원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사업별 총원가산정의 중심점 - 조직단위의 중심점 : 조직 차원에서 조직단위의 자율 중심점, 책임 중심점, 관리 중심점, 정보공개 중심점 등
	도입효과	- 투입과 통제중심의 재정운용에서 자율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 - 기능·정책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 - 프로그램별 재정운용으로 성과관리가 용이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 -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으로 국민의 이해 용이하며,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연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분류 통일)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정답 ②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394

핵심체크 목표의 변동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 동조과잉)	의의	•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으로 뒤바뀌는 현상 • 종국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현상 • 행정의 공국적 목표인 공익보다 수단인 법규를 중시하는 현상
	학자	• 미첼스의 '과두제의 철칙'에서부터 시작 • 머튼과 골드너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동조과잉 지적
	원인	① 과두제의 철칙(소수간부의 권력과 지위 강화 현상), ②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집착(동조과잉), ③ 목표의 무형성과 과다 측정(유형적 목표의 추구), ④ 조직의 내부성과 할거주의 등
목표의 승계	의의	조직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아예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새로운 목표가 과거의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원인	① 종결메커니즘의 결여, ② 관료들의 동태적 보수주의 성향
목표의 다원화	조직이 종래의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목표의 질적 변동)	
목표의 확대	조직이 종래의 목표범위를 확대하는 것(목표의 양적 변동)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정답 ①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이 강조된 조직구조이다.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기술구조부분이 강조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441

핵심체크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

힘이 강한 부문	조직 구조	조 정
전략부문	단순구조	최고관리층의 직접감독에 의한 조정
핵심운영부문	전문적 관료제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중간라인부문	사업부제(분할구조)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기술구조부문	기계적 관료제	과업과정 표준화에 의한 조정
지원참모부문	애드호크라시	전문가들의 상호 적응에 의한 조정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쟁적 규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서비스 공급 의무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 등)를 가한다는 점에서 규제정책과 분배정책의 이질혼합적 성격을 지닌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생산량규제, 퇴거규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 중에서 진입규제와 관련되며, 진입규제 중에서 행정법상 특허만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245**

핵심체크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구분	내 용	
보호적 규제정책	의의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
	성격	재분배정책과 유사한 성격
	예	식품 및 의약품 허가, 근로기준설정, 최저임금제, 공공요금 규제, 환경 규제(개발제한구역 설정), 과대광고 규제, 독과점 규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쟁적 규제정책	의의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
	성격	규제정책과 분배정책의 이질혼합적 성격
	예	항공노선·해운노선·버스노선 인가, 방송국 설립인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① 자연실험이란 인위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의미한다. 진실실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실험집단에만 처치를 해야 하므로 인위적 환경에서 실험이 이루어져 호오손 효과가 강화되나, 준실험은 자연실험이 이루어지므로 호오손 효과가 방지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 34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정답 ②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구성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의견 조사를 한 다음, 참가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및 집단토론을 거친 뒤 의견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조사는 다소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론조사와 달리 참여자 수가 제한되므로 공론조사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대학입학제도개선’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A	B	C	D
①	구두	해저광물	고속도로	등대
②	라면	출근길 시내도로	일기예보	상하수도
③	자동차	공공낙시터	국방	무료TV방송
④	냉장고	케이블TV	목초지	외교

정답 ① 구두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 사적재(A)에 해당하며, 해저광물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유재(B)에 해당하고, 고속도로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요금재(C)에 해당하며, 등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D)에 해당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151

핵심체크 공공서비스의 유형

구별기준		- 배제성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성질 - 경합성 :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특정인의 소비를 방해하는 성질
사적재 (시장재, 민간재)	의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서비스(예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등)
	정부 역할	정부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지만,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서비스의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거나 저소득층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 개입
공공재 (집합재)	개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서비스(예 : 소방, 국방, 치안, 공기, 등대 등)
	성격	① 공동공급·공동소비(집합생산·집합소비), ② 비분리성, ③ 등량소비성(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 ④ 비시장성, ⑤ 비축적성, ⑥ 무형성, ⑦ 선호표출 메커니즘의 결여(무임승차), ⑧ 외부성, ⑨ 한계비용 ≒ 0 등
	정부 역할	시장에 맡겨 둘 경우 무임승차자의 발생으로 인해 항상 과소공급과 과다소비의 쟁점을 야기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공유재	의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서비스(예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등)
	성격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초래
	정부 역할	정부가 공급비용부담과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한 규칙 설정을 위해 개입
요금재 (유료재)	의의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서비스(예 : 가스, 전기, 도로, 통신, 상하수도 등)
	정부 역할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하지만, 최근에는 민영화·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영역